전북자치도, 중동 정세 대응 총력전

비상경제대응체계 TF 가동… 민생물가 · 석유가격 · 수출기업 · 소상공인 집중 관리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본격 가동하고 도·시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중동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과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민생물가, 석유가격,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주유업계의 가격 안정 노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정책 홍보와 시군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필품 가격 조사와 가격표시제 점검, 불공정 상행위 단속 등 민생물가 안정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중동 상황 관련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과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민생물가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실현 노력

민주 도당,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현재 의료 인력과 장비, 상급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중증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수도권 이동이 늘어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수익성 중심의 의료 인력 구조를 보완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그동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남겨진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당은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현장 점검 나선 정은경 복지부장관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에서 열린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현장 소통 간담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

국비 42억원 확보… 시 · 군 협력 기반 지역 연계형 일자리 모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이음 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인력을 연계해 지역 내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산업 성장과 인력 양성, 취업 연계, 일자리의 질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협력형 일자리 모델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익산·정읍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전주-군산-김제-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BIONE(바이원)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형 바이오특화단지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 직종 중심의 고용 창출에 나선다. 관광 분야에서는 '전북특별한(One) STAY: 전주-서해안 체류형 관광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내륙과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허브를 육성하고 채용 연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산업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성장 단계와 현장을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간 산업·인력·자원을 연계해 인력 양성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일자리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전략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도, 폭설 · 한파 속 선제 대응… 자연재난 대책 성공적 마무리

작년 11월 ~ 올해 3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 · 한파 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0회 가동 등 신속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국지성 폭설과 기습적인 한파가 반복되며 기상 상황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도는 대책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대응 상황을 상시 관리하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대설·한파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20회 가동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 2월 7일 도내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정읍·고창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자, 전북자치도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전진기지 19개소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제설 취약구간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해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또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 454개소를 대상으로 마을 이장단과 자율방재단이 참여한 사전 점검과 수시 예찰을 실시하며 재산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응도 강화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도내 6개 부서가 참여하는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실무회의'를 개최해 치매환자 4만6천여 명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와 재난도우미 등 약 9만 명의 인력을 활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72만 건의 안부 확인과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겨울철 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올겨울 자연재난을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지방협업형 필수의료 시범사업 공모선정

정읍아산병원 중심 서남권 소아 야간 · 휴일 입원 · 응급진료 체계 구축

국비 · 지방비 포함 12억8300만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 진료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정읍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서남권 지역 소아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거점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읍아산병원(2차 의료기관)은 야간·휴일 진료를 포함한 소아 입원 및 응급진료를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병·의원 간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 체계를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앞서 2024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도 50%, 시 50%)을 투입해 정읍아산병원에 소아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소아 필수 의료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노력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관광숙박 지원체계 정비

장연국 도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42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숙박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객 수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중·저가숙박시설' 용어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정비하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며 △관광 관련 숙박시설 개선 사업과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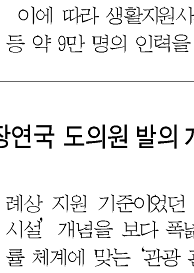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상 지원 기준이었던 '중·저가숙박시설' 개념을 보다 폭넓고 명확한 법률 체계에 맞는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유형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숙박 인프라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기반의 질과 다양성에 달려 있다"며 "한옥체험업과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숙박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만큼,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최광호 완주군의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제도 정비 나서

3억원 이상 외부전문가 검사 의무화… 예산 투명성 · 책임성 강화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의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광호 부의원장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뒤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되는 위탁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사 제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는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위탁금이 관계 법규와 위탁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해당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된 것으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3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결산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루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본사회를 대비한 진안군의 대응과제'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한, 본회의 안건을 통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진안군 자율방범대 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17일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청취하고, 이어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